

경제계 찾은 여야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경북 포항시 포스코 파크(Park)1538 홍보관을 방문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李, 중도보수·실용주의 행보 “국가적 차원 투자길 열어야”

한국경제인협회와 민생경제간담회 李 “기업활동 장애요인 최소화해야” 한경협, ‘경제살리기 10대과제’ 전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국부펀드든 국민펀드든 국가 지원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투자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0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만날 예정인데, ‘중도보수’,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기업인들과 접촉을 늘리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경협과 민생경제간담회를 갖고 “개별 기업 단위가 어려운 대규모 투자, 또는 위험성이 매우 높지만 성공했을 경우 이익이 매우 큰 영역들이 있는데 이것은 개별 기업 단위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투자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장애 요인을 만드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과거처럼 부정부패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특히 전 세계를 상대로 시장을 넓혀가야 한다. 우리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에 류진 한경협 회장은 “(경제 성장의) 해법은 성장이고, 무엇보다 성장의 마중물인 기업 투자가 살아야 한다”며 “창업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업이 정신이 마음껏 발휘되는 제도 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 한경협에 합류한 네이버와 클라우드, 파이브 등 혁신기업

중심으로 신성장 분야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 한경협 측은 이재명 대표에게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등 쟁점이 있지만, 타협의 물꼬가 터졌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시장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 한경협 측은 ‘K-칩스법’이나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특히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해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을 해준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날 한경협은 민주당에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했다. 10대 과제는 크게 투자·민생활력 부여, 신성장동력 확보,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대기업 포함 2026년까지 연장하고,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보조금 지원, 공시대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SW) 아카데미(SSAFY·사피)를 찾아 이재용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이 회동에서 경제위기로 고충이 큰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이 회장의 입장도 청취할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與, ‘친기업·친성장’ 강조 “철강산업 지원법 발의 검토”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 현장간담회 美 철강 25% 관세 해결책 제시할 것 이재명 중도공락 행보 견제 움직임

국민의힘이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철강산업 지원법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지도부가 ‘친기업·친성장’ 기조를 앞세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중도공락 행보를 적극 견제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경북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제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철강산업은 제조업 생산의 6.7%, 수출의 5.6%를 차지하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트럼프 1기 행정부와 같이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또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기술력 신장이 중요하다”며 “저탄소 고부가가치 기술과 미래 수요를 개발해야 한다. 일본과 EU처럼 탄소중립, R&D(연구개발), 실증상용설비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철강산업 지원에 대한 콘센서스(합의)가 마련됐지만, 지원 법안이 산발

적으로 흩어져 있다”며 “국가전략·원천기술 선택액공제 확대와 국내 철강 공급망 강화를 위한 원산지 규정 확대 등 각종 지원을 개선할 ‘철강산업 지원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최근 대한민국의 철강 산업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다”며 “사실상 미국의 25%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도 전인데, 수출실적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중국산 조강제의 국내 유입을 통한 가공 수출, 외국 근로자 문제 등 정부 측과 협의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포스코 Park 1538 홍보관과 제2후관공장 및 청송대를 방문해 철강산업 현장을 둘러봤다. 권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포스코가 대한민국입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작성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포항제철소 방문 외에도 ‘우클릭’ 행보를 지속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움직임을 계속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포항제철소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상속세 개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적용 예외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어떻게 (편성)할건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다”며 “주제 제한 없이 토론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구조” 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주도의 기업 운영이 아닌, 민간 중심의 창의적 혁신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李 지지율, 50% 돌파... 후발주자들 ‘오픈 프라이머리’로 견제

(완전국민경선)

조국혁신당, 민주당 내 비명계 등 제안 경선을 언급 부적절... 실현 어려울 듯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야권 잠룡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최근 지지율 50% 벽을 넘자,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방식 후보 선출 방식까지 제시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전날(4일) 100% 온라인 국민 투표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 대행은 “각 정당의 모든 후보들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원 샷 방식으로 진행하자”며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 투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자”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이 야권 연대의 협상을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시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완주하며 진보진영의 표가 나뉘어 이재명 대표가 0.73% 차이로 낙선한 전력 있다. 이에 협상력을 높이려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시해, 범야권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비명계 전직 의원 모임인 초일회 간사를 맡고 있는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아주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었는데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 그를 중심으로 정권교체가 어

렵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지지층을 확장해야 하는 민주당은 조기 대선 경선을 역동적이고 모두가 화합·통합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혁신당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며 “민주당은 연대·통합이 아니라 분열했을 때 대선에 패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년 전을 돌아보면 정의당 등 다른 진보세력과 연대했다면 0.73% 차이로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야권 주자들의 오픈 프라이머리 제시는 이 대표의 지지율이 앞서고 있어 이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리

얼미터가 지난 3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선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50%,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1.6%를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도 이 대표의 지지율은 모두 50%를 넘겼다. 이에 탄핵심판이 인용된다면 이 대표의 독주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경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다.

또 오픈 프라이머리는 타 진영 지지층이 들어와 ‘역선택’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해 민주당 내부의 기존 경선물을 바꿔야 하는데, 이 경우 전(全)당원투

표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남아 있다.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하면서, 당원을 경선에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아예 무시로 일관할 수는 없다는 예측도 있다. 거대 정당으로서 소수 정당의 요구를 묵살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연대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어서다. 이에 야5당 원탁회의 의제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리얼미터 여론 조사는 지난달 26~28일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RDD)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